POLITICS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김영록 지사, 전남 핵심 현안 건의 광폭행보

김민석 국무총리·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 잇단 면담
의대·석화 철강산업 위기 극복·에너지혁신성장벨트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남도 핵심 사업 해결을 위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립의대 설립, 서남권 에너지혁신성장벨트 구축,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 등 전남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전방위 건의에 나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온 김 지사의 '광폭 행보'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지역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2027년 의대 정원 논의 시 의대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을 우선 배정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오랜 기간 유치 노력을 펼쳐온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는 대한민국 유치 선포와 함께,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을 개최 도시로 먼저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인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신속한 결정처리를 위해 중앙위원회의 인력 확충 등도 요청했다.

또한 해상풍력·태양광 등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전남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를 구축해 RE 100산단 등 미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규제, 미국 관세 충격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고용위기지역(여수)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광양) 지정과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친환경 공정혁신과 산업 대전환 등을 건의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구축'과 관련 석유화학·철강산단을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산단'으로 신속히 추진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극한호우와 폭염 등 빈번한 자연재난의 현실적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 원 이상 피해 지역에 대한 국고 50% 지원과, 현행 최대 50%인 농축어업 재해보험료 할증률 10%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 도약 위해 힘쓰겠다" 김화진 국힘 도당위원장 취임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11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새로운 도전, 다시 전남을 위해'를 슬로건으로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임으로 김 위원장은 4연임을 확정지었으며, 2026년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배숙·안철수·박정하 국회의원, 안태욱 광주시당위원장, 양향자·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전남 지역 당협위원장과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취임사, 축사, 임명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의 지난 4년간 활동을 담은 영상이 상영돼 박수갈채를 받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문수·조경태 당 대표 후보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송 위원장은 "전례 없는 4연임을 통해 전남도당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전남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4년간 전남의 험지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신뢰를 쌓아왔다"며 "전남의 더 큰 도약과 변화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에 당당히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의 험지가 아닌 보수의 희망이 돼 전남 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도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정진욱 "악취관리 조치 필요" SRF 악취 '건강·환경권' 위협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에서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되고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2일과 13일, 광주시의 의뢰를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악취측정 결과 SRF 배출구에서 희석배수 669가 검출됐다. 이는 법정 허용기준인 500을 초과하는 수치다. 하지만 측정 사실과 수치는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또 지난 8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악취 채취 결과 SRF 부지 경계에서도 허용기준 15를 넘어서는 희석배수 30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진욱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10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도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SRF 주변 '악취관리지역' 지정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 TF' 구성 △악취저감시설 성능 검증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악취 측정 결과와 대책 마련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악취 발생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저 또한 주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모든 절차와 대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전남도, 동부권 현장행보…위기 돌파·미래산업 강화

강위원 부지사, 오늘부터 3일간 핵심 산업지 점검
이차전지·우주항공·석유화학 지원책 마련 등 앞장

전남도가 민생경제 회복과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전남 동부권 주요 산업현장 점검에 나선다.

전남도에 따르면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12일부터 3일간 석유화학·이차전지·우주항공 등 산업의 핵심 거점을 직접 살피며 산업 위기 돌파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첫날인 12일 여수 묘도 LNG허브터미널 건설 현장을 시작으로 LG화학 여수공장, KCL 방폭·화재안전센터, 여수상공회의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산업 기반과 안전 인프라를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13일에는 전남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하고 포스코퓨처엠 공장을 방문한다. 광양만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이 협력해 국가 전략사업 유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14일에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고흥항공센터, 고흥드론센터 등 우주항공 거점을 집중 점검하고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제2우주센터 구축 등 미래 우주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현안 과제를 긴밀히 논의한다.

강위원 부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산업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국비 확보·제도 개선·투자유치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현장 중심의 실용 행정 실현을 위해 매월 동부권 등 주요 현장에서 소통하고, 기업과 도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행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위기지역 산업 회복 지원 강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반 마련, 우주항공 기반 확충, 현장 중심의 민생 대응정책 강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주 '호남발전특위' 이달 공식 출범

위원 50명 선발…수석부위원장에 이병훈·김성·이원택 내정

더불어민주당 상설특별위원회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가 이번 달 내 50명 안팎의 특위 위원들을 선발해 공식 출범한다.

서삼석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영암·무안·신안 3선 국회의원)은 11일 "호남발전특위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장전문가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해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전북 각 광역단체별 특위 위원은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전체 특위 위원은 광역단체별 위원 총 45명과 지도부 인사 등을 고려할 때 총 5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으로는 이병훈 전 국회의원(광주), 김성 장흥군수(전남), 이원택 국회의원(전북)이 내정됐다.

서 위원장은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지사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검증된 지역 정책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이병훈 전 국회의원

김성 장흥군수

이어 "김성 수석부위원장은 재선 장흥군수로 현재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원택 수석부위원장은 전북 지역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전북 부지사와 청와대 자치발전 행정관을 역임한 지역발전 전문가로 손꼽힌다"고 소개했다.

서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단의 풍부한 입법·행정 경험과 전문성은 특위가 호남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발전 아젠다를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속전속결

'미루면 지방선거 개입 논란' 고려한 듯
광복절·국민임명식 행사 통합메시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 끝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조기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지층 결집과 국정 동력 강화를 위한 범여권 통합 효과를 겨냥한 결정으로, 시간을 끌수록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사면에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 사면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조국혁신당과 친문계 인사들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은 만큼 사면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임기 초 민감한 인물 사면이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기면서까지 결정을 서둘렀고, 불가피한 논란은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특유의 '정면 돌파' 방식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 사면 요구는 검찰개혁론을 공유하는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미 형성돼 있었다. 여기에 시민사회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를 계속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광복절 특사를 넘기면 연말 또는 신년 특사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고, 이 경우 내년 지방선거 개입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은 범여권 핵심 지지층의 '청구서'를 처리하면서, 헌법 수호 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다만 역풍도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4~8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8세 이상 2,50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6.5%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했다. 취임 후 최저치로,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논란이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전한 '불공정', '내로남불' 인식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싼 불만이 감지된다. 이 대통령은 중도·보수층의 반발을 달래고 내부 지지층의 균열을 봉합하는 '이중의 통합'을 당면 과제로 안게 됐다.

대통령실은 80주년 광복절 행사와 '국민 임명식' 성격의 대규모 행사 등을 계기로 통합 메시지를 내놓고, 사면 논란을 국정 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

2025년 8월 15일 0시 석방(일반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등 총 83만6,687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선고실효 및 복권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대표 아내)
복권	심학봉	전 의원*
	송광호	전 의원
	윤건영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야권 인사
경제인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복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 법무부

광주시의회, 14일 예결특위 새 위원 선임

의장 몫 추천 포기, 정원 8명…혁신안도 마련

예결위원 선임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회가 오는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예결특위를 새로 구성키로 했다.

시의회는 차기 예결위원 선임에 나섰지만, 논란 당사자를 제외하면 정원조차 채울 수 없어 결국 예결위원 숫자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1일 예결특위 관련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제9대 의회 마지막 예결특위를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1명을 줄이기로 했다.

의장 몫의 추천(1명)을 포기하고, 4개 상임위별로 2명씩 추천 받아 8명의 예결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 행위 논란 속에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의원 10명은 제외된다.

시의회는 임시회 개회 전에 각 상임위별로 추천 대상을 정한 뒤 오는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결특위 8인 체제'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와 별도로 '쪽지 예산'이나 '묻지마식 증액·삭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결위 운영 혁신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결의했다.

다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10명의 의원을 차기 예결위원에 선임할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첫 심리를 열어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여 오는 14일 예결위원 선임 전까지 징계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수기 의원은 "의회 일정상 오는 14일 예결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윤리심판원 징계 일정 등은 민주당 광주시당과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의장은 "새로운 예결특위 구성은 최근 전원 사퇴한 4기 예결위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오는 28일 8월 임시회를 앞두고 더 늦기 전에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무소속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도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